

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
(정동만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928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9. 11.

발 의 자 : 정동만 · 김선교 · 김상욱  
이달희 · 김은혜 · 김위상  
백종현 · 강민국 · 엄태영  
김석기 · 최은석 의원  
(11인)

제안이유

최근 국민이 청원권을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온라인청원을 도입하고 공개청원과 청원심의회 운영 근거 마련 등과 같이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위하여 전부개정한 바 있음.

그간 개정된 법률에 따라 청원제도를 운영 함에 있어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원기관의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, 청원심의회를 청원기관의 규모, 업무성격 등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, 공개청원으로 신청된 청원을 공개로 결정하려는 경우 반드시 청원심의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절차를 개선하여 청원기관의 장이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원심의회 심의 없이 공개 결정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청원인과 청원기관의 불편을 해소하고 청

원을 더욱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일부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

## 주요내용

### 가. 청원기관 범위 명확화(안 제4조)

공공기관이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령해석 상 혼선을 줄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을 청원기관에 포함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

### 나. 청원 처리의 예외 사유 추가(안 제6조)

청원심의 또는 청원 처리의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명시함으로써 이를 처리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도록 규정

### 다. 청원심의회 운영의 효율화(안 제8조제1항)

청원기관의 규모, 업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청원심의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상급기관 등에 설치된 청원심의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

### 라. 공개청원 절차의 간소화(안 제13조제1항)

청원기관의 장이 공개청원에 대하여 공개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청원심의회를 거치지 않도록 하고, 공개 부적합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청원심의회를 거치도록 규정

### 마. 반복 이송되는 청원의 소관기관 조정 근거 마련(안 제15조의2)

청원사항의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 기관 간 반복적으로 이송되는 이른바 ‘핑퐁청원’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소관기관

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

바. 반복청원의 종결처리 절차 간소화(안 제16조제1항)

동일한 내용으로 반복되는 청원에 대한 종결처리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함



##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청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호(종전의 제3호) 중 “법령”을 “법령 또는 자치법규”로 한다.

### 3. 공공기관

가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법인·단체 또는 기관

나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

다.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

라.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

마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·단체 또는 기관

제6조제1호 중 “국가기밀”을 “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,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및 제4조제3호 또는 제4호의 청원기관은 기관의 규모와 업무성격, 지리적

여건, 청원인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, 본청 및 소속 상급기관(지방공사·지방공단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공사·지방공단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)과 협의를 거쳐 심의회를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13조제1항 중 “접수일”을 “접수일(제15조에 따라 보완하는 경우에는 보완완료일)”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청원기관의 장이 공개청원에 공개 부적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공개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2(이송된 청원의 조정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소관 청원기관이 불명확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청원서가 반복적으로 이송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 청원의 소관기관을 조정할 수 있다.

② 법원·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소관기관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16조제1항 중 “2건”을 “정당한 사유 없이 2건”으로, “알려야”를 “1회 이상 알려야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청원기관) 이 법에 따라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(이하 “청원기관”이라 한 다)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2. (생략) <u>&lt;신 설&gt;</u>	제4조(청원기관) ----- ----- ----- -----. 1. 2. (현행과 같음) 3. <u>공공기관</u> 가. 「 <u>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한 법률</u> 」 제4조에 따른 <u>법인·단체 또는 기관</u> 나. 「 <u>지방공기업법</u> 」에 따 <u>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</u> 다. <u>특별법에 따라 설립된</u> <u>특수법인</u> 라. 「 <u>초·중등교육법</u> 」, 「 <u>고등교육법</u> 」 및 그 밖 <u>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</u> <u>치된 각급 학교</u> 마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<u>정하는 법인·단체 또는</u> <u>기관</u> 4. <u>법령 또는 자치법규</u> ----- ----- ----- -----
3. <u>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 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 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·단 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</u>	

제6조(청원 처리의 예외)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유를 청원인(제11조제3항에 따른 공동청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)에게 알려야 한다.

1.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

2. ~ 6. (생략)

제8조(청원심의회) ① 청원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원심의회(이하 “청원심의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<후단 신설>

제6조(청원 처리의 예외) -----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.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-----

2. ~ 6.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청원심의회) ① -----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,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및 제4조제3호 또는 제4호의 청원기관은 기관의 규모와 업무성격, 지리적 여건, 청원인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, 본청 및 소속 상급기관(지방공사·지방공단)의 경우에는 해당



<p>제16조(반복청원 및 이중청원)</p> <p>① 청원기관의 장은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같은 청원기관에 <u>2건</u> 이상 제출한 반복청원의 경우에는 나중에 제출된 청원서를 반려하거나 종결처리할 수 있고, 종결처리하는 경우 이를 청원인에게 <u>알려</u>야 한다.</p> <p>② · ③ (생략)</p>	<p><u>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 청원의 소관기관을 조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법원 ·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소관기관을 조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16조(반복청원 및 이중청원)</p> <p>① ----- ----- ---- <u>정당한 사유 없이 2건</u> - ----- ----- ----- ----- <u>1회 이상 알려</u> <u>야</u> -----.</p> 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
---	---